

-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-
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

2018. 5.

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
한국거래소 · 예탁결제원
한국증권금융 · 코스콤
금융투자협회

목 차

I. 그간의 경과	1
II.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문제점	3
III.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	5
가. 현행 주식 매매 절차	5
나.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	7
1. 매매주문 이전 단계	7
2. 매매주문 단계	10
3. 매매주문 이후 단계	15
4. 기타	17
IV.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	19
V.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	22
VI. 향후 추진계획	31

I. 그간의 경과

- '18.4.6 삼성증권은 당해 회사 **우리사주조합원**(2,018명)에 대한 **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***하는 사고 발생
 - * (당초) 주당 1천원 배당 → (사고 내용) 주당 1천주, 총 28.1억주 입고
-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**22명이 1,208만주를 매도주문**하였고 이중 **501만주(16명) 계약이 체결**(9:35~10:06, 31분간)
 - *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약 △12% 하락(39,800원 → 35,150원)
- 금융위는 **시장혼란을 방지**하고 관련 **사고 재발방지**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**대응방안을 마련**
 - **대규모 매도**에 따른 **결제불이행**에 대비하여 결제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**정상결제** 처리되도록 조치(4.10)
 -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**불공정거래 조사**(4.9~) 및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**금감원 현장검사**(4.11~5.3) 등을 진행
 - **재발 방지**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**“주식 매매제도 개선반”***을 구성하여 운영(4.10~)
 - * 금융위, 금감원, 거래소, 예탁원, 코스콤, 증권금융, 금투협, 자본연 등
- 삼성증권에 대한 **금감원 검사 및 자조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**(5.8)
 - ①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허술한 배당절차, ②**내부통제의 허점**, ③**전산시스템 상 오류 검증장치** 및 ④**착오물량에 대한 매매 차단 프로세스 부재**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
- 현재 금감원은 **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, 검증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점검 중**(5.9 ~6.8 예정)

⇒ 금감원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 재발방지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**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**을 마련

별첨1

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

1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

- 실무자가 전일(4.5) 전산시스템에 현금배당 대신 **주식배당 입력** → 담당 **팀장이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**
- 우리사주조합 관리업무는 증권사 직제상 총무팀 소관임에도 **증권관리팀에서 처리**하였으며 **업무매뉴얼도 부재**
-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**동일 시스템에서 처리**하는 가운데 **입·출고 프로세스 설계**에 문제

2 주식입고 시스템

- 고객이 **실물주식을 입고**할 경우 **예탁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** 하기 전에 **주식매도를 허용**하는 시스템을 운영
- 발행주식 총수(8천9백만주) 이상의 주식이 입고 되었음에도 **오류 검증 및 입력 거부**가 되지 않음*
 - * '18.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 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오류검증 테스트 미 실시

3 직원의 주식 매도

- **22명이 1,208만주 매도주문**하여 **501만주 계약(16명)**이 체결되었으며 **주문차단 등 대응 매뉴얼 및 직원 준법교육** 등이 크게 미흡

4 삼성증권 사고대응 미흡

- ① 사고 인지(09:37) 이후 신속한 **매매주문 차단***과 **착오입고 주식에 대한 출고제한**** 등의 조치에 실패
 - * 임직원 계좌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어 매매정지 조치에 37분 소요
 - ** 착오입고 주식의 일괄출고에 시스템 오류발생으로 54분 소요
- ② 우발상황에 대한 **위험관리 비상계획**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**체계적 대응**이 불가

II.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문제점

◆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에서 **주식 잔고 관리 및 매매 프로세스**에 대한 근본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

1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 관리 문제

-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**처리 프로세스가 상이한 만큼 별도로 처리**되어야 하는데, 이를 **동일하게 처리**
 - 조합원에 현금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에서 **주식 입고**가 가능함에 따라 **착오 등에 따른 사고 발생** 소지
- 일부 배당처리 프로세스도 잘못 운영되었고 **통제절차도 부족**
 -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계좌에서 **주식을 출고**하기 이전에 **조합원 계좌에 주식을 입고**처리하는 업무 프로세스 문제

* (정상처리) 조합장 계좌 출고·출금 → 조합원 계좌 입고·입금
(삼성증권) 조합원 계좌 입고·입금 → 조합장 계좌 출고·출금

2 착오주식의 입고와 주문·매매 가능성

- 증권사에서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여 착오로 주식이 입고 될 수 있었으며 보유 주식에 대한 체계적 잔고관리도 미흡
 - 실무자의 시스템 입력 오류를 담당 결재권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투자자계좌에 **주식 착오입고**가 가능
 - 투자자가 실물주식을 입고한 경우 **예탁결제원의 진위 여부 확인** 이전에 **주식매도**가 가능

* 정상적인 절차는 예탁원에서 실물주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승인이 된 이후 고객의 주식매도가 가능해야 착오 등 방지 가능

- 전체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 되더라도 증권사 자체 시스템에서 검증하지 못하고 입력제한이 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

3 착오주식 관련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 미흡

- 증권사가 착오로 투자자에게 주식을 입고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이에 대한 **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미흡**
 - 착오입고 주식에 대한 **매도주문을 신속하게 차단**하거나 **즉각적인 출고**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가능*
- * 삼성증권 사고의 경우, 임직원 계좌에 대한 별도의 매매정지 프로그램이 없었고, 착오입고 주식에 대한 일괄출고 과정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
- 직원들에게 착오로 주식이 입고된 사실과 매도 자체요청을 공지하였으나 실제 매도주문을 차단하지는 못한 측면
- 특히, 발행물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매도주문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증권사 내부 및 시장에서 적출될 수 없는 상황

4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주문 체결 우려

- 주식 매매시점에 투자자의 주식 보유잔고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 - 장중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**주식매매와 잔고관리**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- 삼성증권 직원이 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**공매도 자체를 금지**해야 한다는 의견*도 제기

*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('18.4.6~5.6) : 총 24.2만명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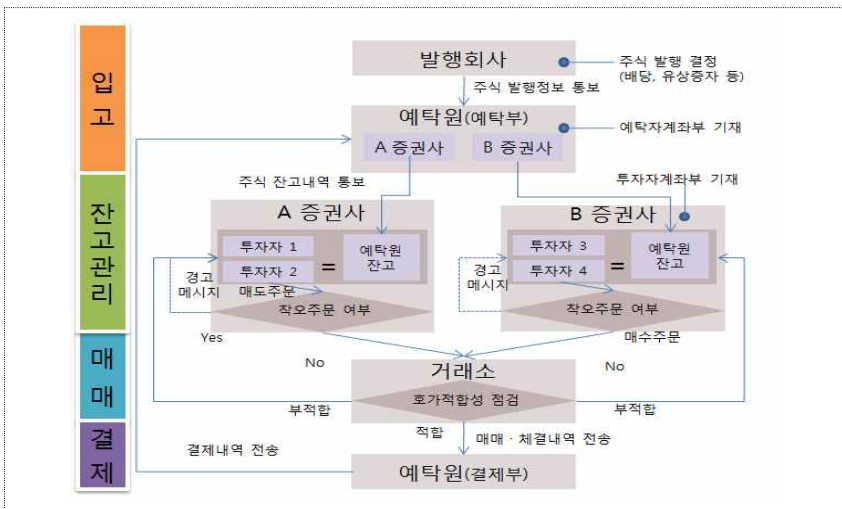
⇒ 주식을 중개·매매하는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하여 **엄격한 대내외 통제방안**을 마련하고 **주식 매매제도를 정비**할 필요

Ⅲ.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

가. 현행 주식 매매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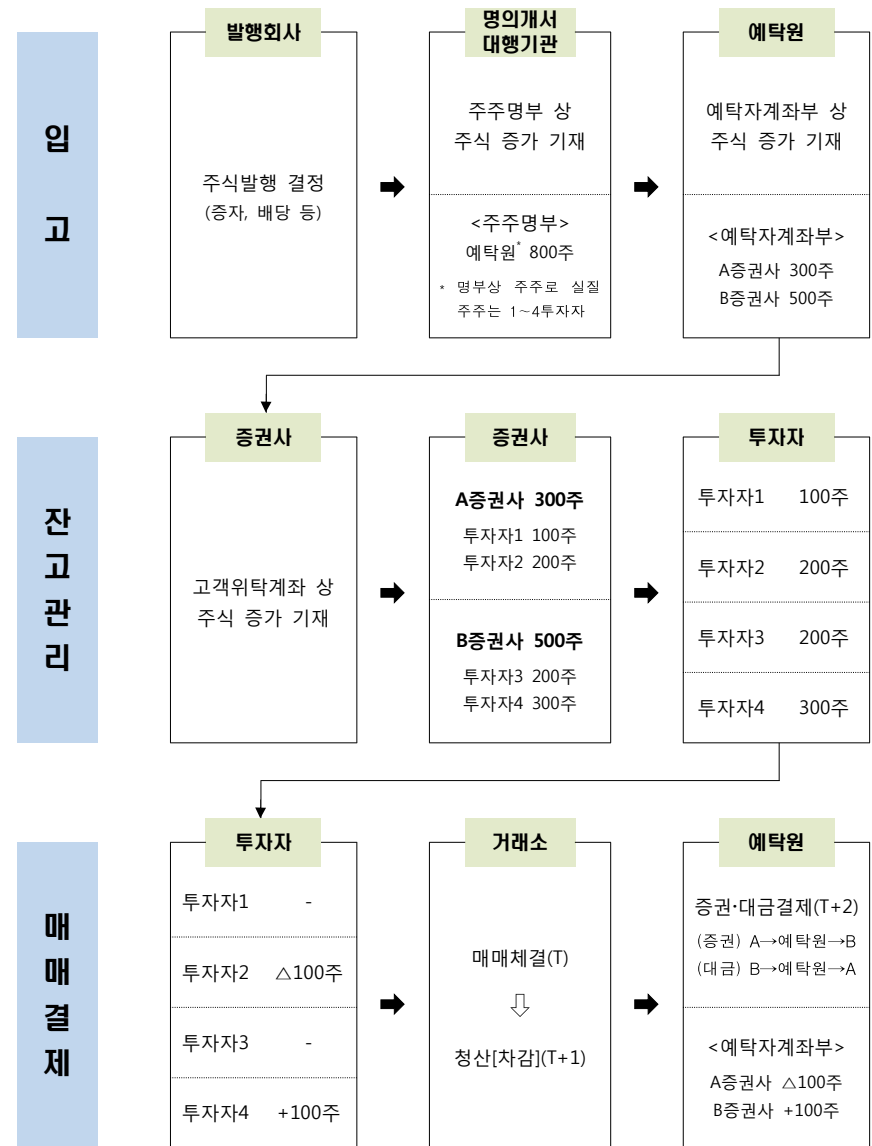
- 주식매매를 위한 단계는 크게 “입고 → 잔고관리 → 매매 주문·체결 → 결제”로 구성
- (입고) 회사가 증자, 배당 등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면 예탁결제원(명부상 주주)은 발행내역에 따라 예탁자계좌부에 기재
- (잔고관리) 증권사 등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잔고내역을 받아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자계좌부(위탁계좌)에 배분·기재
- (매매주문·체결) 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의 매매주문 호가를 접수하고 호가적합성을 점검한 후 매매를 체결
- (결제)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매매·체결내역에 따라 증권사 간 주식 및 대금을 인수도하고 증감내역을 예탁자계좌부에 반영
- 입고 등의 절차가 없으면 익일에는 잔고관리 단계부터 진행

<현행 주식 매매 절차>



별첨2

현행 주식발행 등 업무 흐름도(발행주식수 변동)



나.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

1 매매주문 이전 단계 (입고/잔고관리 단계)

(과제1)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의 관리 강화 (입고단계)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☐ 현행 매매 시스템상 투자자는 증권사 내 본인의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보유주식에 기초하여 매매주문을 내는 구조
 - ① 투자자가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거나 배당,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,
 - 우선 예탁결제원(예탁자계좌부)에 반영되고 당해 잔고를 증권사 내 투자자 계좌인 투자자계좌부와 대사·검증을 통해 관리
 - ② 다만, 실물입고 등*의 경우 증권사 내 투자자계좌부에 먼저 반영된 후 예탁결제원(예탁자계좌부)과 대사·검증하여 관리
 - * (예) 실물입출고 등 예탁·반환, 매수청구 등 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식이 증감하는 경우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에 선반영
- ☐ 주식입출고 관리가 허술할 경우,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되어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사고 발생이 가능
 -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실물입고한 경우 예탁결제원에서 해당 주식의 진위여부를 사전확인 전에 매도가 가능
 - 증권사 담당 직원·팀장 승인만으로 주식입고 및 투자자계좌 반영이 가능하여 착오 입고 등에 대한 통제가 불충분한 경우 발생
 - 특히, 증권사에서 수작업으로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오류와 착오 발생 가능성이 상존

(2) 개선방안

- ☐ 착오입고 가능성이 있는 실물 입출고 등에 대해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상호 확인절차를 강화
 -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입고 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를 제한*
 - * 증권사 내 처분제한 시스템 마련 및 예탁결제원과의 확인절차 개선
 - 권리행사 등으로 주식이 발행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계좌 대체 등에 대한 증권사 내부 검증 프로세스 구축
- ☐ 주식 입출고 시 관계기관간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강화
 -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준법 감시부서의 사전확인을 거쳐 처리하도록 의무화
 - 주식잔고 변경 사유별로 발행회사(명의개서대리인), 예탁결제원, 증권사의 상호검증이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마련 및 개선
 - * (예) 수작업 처리 사항에 대한 전산화 또는 부서간 상호검증 등 마련
- ☐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 최소화를 위한 입출고 한도 설정
 -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금액·수량 등을 기준으로 사전 회당 처리한도를 설정*하고 한도 초과시 통제
 - * (예) 발행주식 총수 대비 5%, 종가 기준 60억원 이상
- ☐ 증권사 주식 입출고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
 - 주식입고 처리 오류 등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증권사 시스템 점검을 최소 연 1~2회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

→ 금투협 규정 등 개정, 증권사 내규·시스템 정비 등

※ 전체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점검(~6월초) 이후 내부통제기준 개선 관련 세부방안 마련 예정

[과제2]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 구축 (잔고관리 단계)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보유주식 수를 변동시키는 주식 입출고가 마무리되면 해당 사항이 투자자계좌부에 반영되고 주식 매매가능 수량이 확정
 -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는 매일 장 마감 이후 기관별 보유주식 총량을 상호대조하여 보유주식 수를 검증하고
 - 증권사의 개별 투자자별 주식잔고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계좌부를 통해 사후 관리

(2) 개선방안

-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별 잔고를 사전 검증하여 착오입고 및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 초과주문 등 오류발생을 최소화
 - ① 장 개시 전에 증권사는 기존 보유주식과 배당, 유상증자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·검증*
 - * 예탁결제원에서 증권사에 주식입고 수량 등을 사전 통보 → 증권사에서 ①예탁결제원 통보 수량, ②투자자계좌부 상 주식 총량, ③ 투자자별 주식 수량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체계 구축
 - ② 장중 증권사는 주식 매매유형(공매도, 일반, 기타)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문을 차단

<주식 보유잔고 검증장치(案)>



→ 금투협 규정 등 개정, 증권사·유관기관 시스템 정비 등

2 | 매매주문 단계

[과제3] 실시간 「주식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」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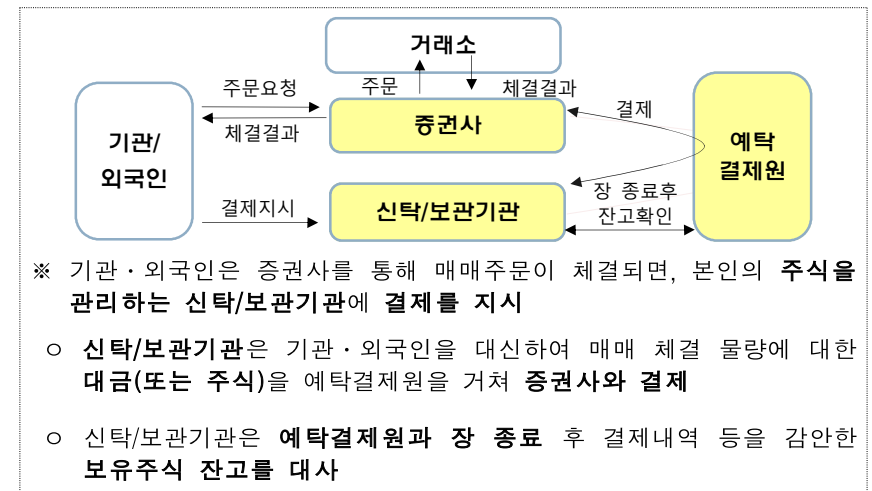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*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**

* 투자자의 매매가능 수량은 공매도 거래를 제외하면 기존 보유주식 + 배당, 권리변환 등 신규 발행주식+주식매매수량(미결제분)

** 장중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주식매매와 잔고관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
< 기관·외국인의 주식 매매 및 잔고관리체계(현재) >



- 매매주문 단계에서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문을 확인할 수 있다면
 - 착오 입고 또는 주문 등에 따른 매매주문·체결사고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가능

(2) 개선방안

□ 「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(FIMS)*」 사례를 감안하여 실시간으로
주식잔고와 매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* 외국인 ID부여 등 투자등록 및 외국인 투자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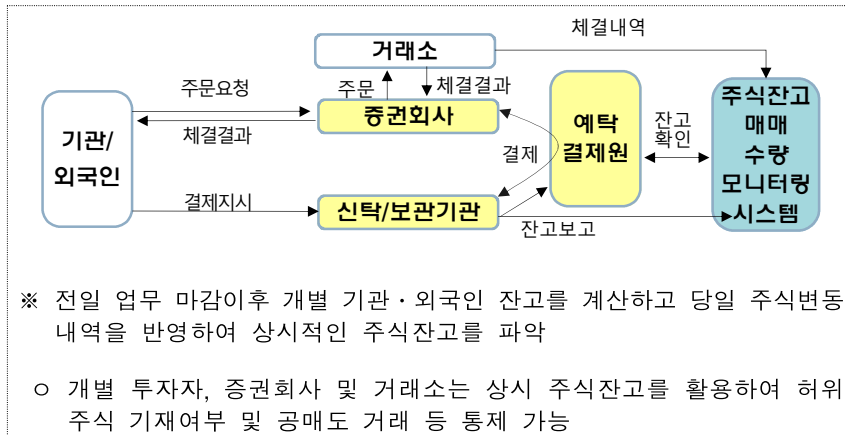
- 장 개시 전에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
매매가능 수량*을 산정하고, 장중 주식 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
등을 파악하여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

* 예탁자 계좌부상 주식잔고 + 주식순매수 규모(미결제분) + 배당, 유상
증자 등 신규발행 물량 등 합산

□ 매매주문이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
이상거래로 보아 신속하게 대응

- 매매 이후에도 이상거래에 대한 발생사유 등을 확인·분석
하여 사후적으로도 주식 매매의 위법성 등을 조사

< 기관·외국인의 주식 매매 및 잔고관리체계(개선안) >



→ “실시간 주식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” 추진

*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정보 집중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세부
방안 마련 및 시스템 개편,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

별첨3

주식 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

1. 개요

□ 기관·외국인의 주식잔고와 매매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
시스템으로 착오입고 또는 착오주문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

* 개인은 주식 예탁·보관기관과 매매주문을 수탁한 기관이 증권사로
단일기관에서 잔고관리와 매매를 함께 처리하여 도입 실익이 없음

- 향후 매매주문 시 주식잔고와 주문수량을 비교할 수 있어
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확인 장치로도 활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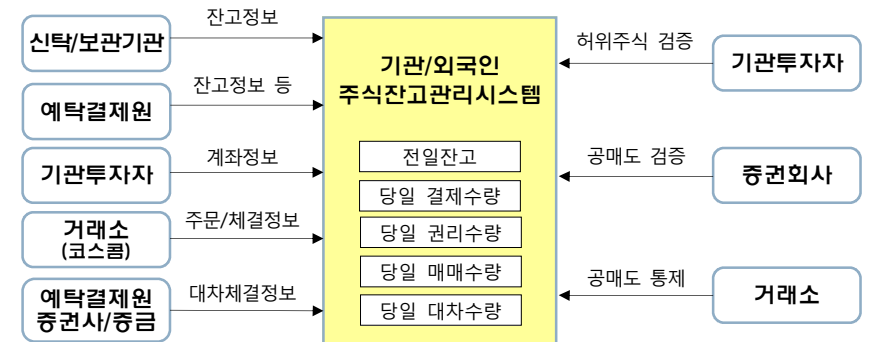
* 현재는 매 영업일 업무마감 이후 주식잔고를 검증하는 체계

2. 시스템 구축 방안

□ 전일 업무마감 이후 개별 기관·외국인 주식잔고를 산정하고
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

- 기관투자자, 증권회사 및 거래소는 상시 파악한 주식잔고를
통해 착오 입고·주문 및 공매도 등에 대한 관리·확인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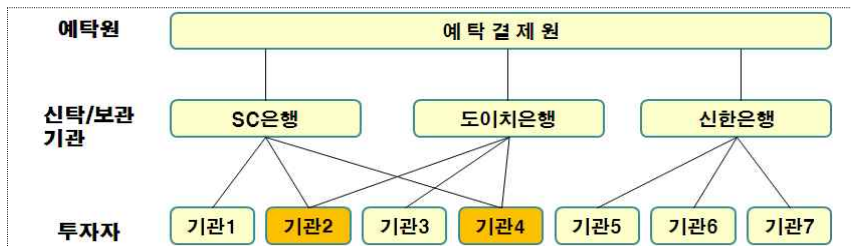
< 주식 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구조(案) >



※ 시스템 안정성, 데이터 정확성 등을 감안하여 실제 시스템 구축 과정상
데이터 취합 범위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·추진할 계획

- 주식잔고는 **예탁결제원 보유잔고(예탁자계좌부)**를 바탕으로 **미결제분**은 거래소의 **매매체결내역** 등을 통해 파악하고 관리
 - 신탁·보관기관 및 예탁결제원은 **전일 매매분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잔고를 유지** → 전일 매매체결 내역을 통해 조정
- 주식잔고는 원칙적으로 신탁업자, 보관기관 등 예탁기관을 통해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구축
 - 신탁·보관기관은 예탁결제원과 매일 주식잔고를 확인하고 위탁자와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잔고 보고가 가능

< 기관투자자 보유주식 관리체계 예시 >



- 신탁·보관기관이 투자자별 세부잔고를 예탁결제원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업무 편의 등을 감안하여 예탁결제원이 취함

<주식 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(案)>

업무절차	비고
① (장 개시전) 기관·외국인 잔고 확정 - 신탁, 보관기관은 투자자(기관, 외국인)의 결제물량을 예탁결제원과 확인하고 잔고보고 - 배당, 유상증자 등에 따른 신주발행시 장 개시전 반영 - 전일 미결제분은 동 기간 중 매매체결물량을 바탕으로 잔고보고 이후 투자자 잔고를 계산	신탁·보관기관, 예탁결제원간 cross check
② (장중) 주문체결 내역 등 반영 - 거래소(코스콤)를 통해 매매체결 내역 반영 - 장중 잔고변경분(예: 대차, 익일정정 등)에 대한 신고	거래소 잔고변동 주체
③ (장 마감) 공매도 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적출 - 이상거래내역을 거래소 등에 제공 → 감리 등에 활용	거래소

※ 현재 금융회사와 예탁원, 거래소 등은 주식잔고 관리 및 매매체결을 위한 시스템이 **既存** → 정보정확성 확보 및 기관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행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

[과제4]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 개선 (매매주문 단계)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투자자 및 직원의 착오주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문에 대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매매 체결을 관리
 - 증권사는 매매 주문금액이나 수량 등이 과도할 경우 내부 경고를 안내하거나 매매 체결을 보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

<주식 매매시 경고·보류 기준(금투협)>

주문금액		주문수량(상장주식 수 기준)	
경고기준	보류기준	경고기준	보류기준
30억 ~ 60억	60억 초과	1% ~ 3%	3%

- 증권사 점검결과 대규모 매도주문이 발생하였음에도 경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확인됨
 - 일부 증권사는 현행 금투협 규정*상 주식 매매 경고·보류 기준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

* '12.10월 금투협에서 「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」 마련

(2) 개선방안

- 증권사 시스템에서 금투협에서 마련한 '주식 매매 경고·보류 기준'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점검·시행
 - 주식매매 경고·보류기준 미반영 증권사에 대한 반영 의무화
- 금투협 규정 및 증권사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*

* (예) 개인 - 경고 10억원 또는 1% 이상 / 보류 30억원 또는 2% 이상
기관 - 경고 20억원 또는 1% 이상 / 보류 60억원 또는 3% 이상

→ 금투협 규정 개정 및 증권사 시스템 정비

3 매매주문 이후 단계

[과제5] 「비상 버튼 시스템」 등 매매 차단절차 강화 (매매체결 단계)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주식 매매과정 상 사고 등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통상 투자자 동의를 거쳐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거래를 정지
 - 주식 착오입고에 따른 대량 매도주문 등 시장충격 발생 시 증권사 내부에서 신속히 차단*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족
 - * 삼성증권 배당사고시 사고 인지 후 실제 매매정지까지 약 40분 소요
- 특히, 증권사는 주식입고 관리 및 매매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매매 등에 대한 보다 강화된 차단장치가 필요
 - * 증권사에서 주식을 착오입고한 후 임직원이 대량 매도주문을 낼 경우 주가 급락 등 시장충격이 크게 발생 가능

(2) 개선방안

- ① 증권사 전 임직원 주문을 차단하는 「비상 버튼 시스템」 구축
 - 증권사고 발생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, 준법감시부서에서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*
 - * 상황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자에게 선조치 권한을 부여
 - 사고 해결로 매매를 허용하는 경우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해제
- ② 일반 위탁계좌에 대해서도 적시에 신속하게 매매차단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매뉴얼(사실관계 확인 및 투자자 동의 등) 마련
 - * 일반 위탁계좌의 경우 증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좌를 차단하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동의가 선행될 필요

→ 금투협 규정 개정 및 증권사 시스템 정비

[과제6] 호가수량 제한기준 강화 (매매체결 단계)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착오 등에 의한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(매매주문)로 시장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호가를 거부하는 장치를 운영 중
 -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% 초과할 경우 호가 거부가 가능
- 다만, 현행 기준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 통제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
 -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별 호가 금액은 최대 약 16조원, 호가 수량은 최대 약 3억2천1백만주로 다소 비현실적

<종목별 최대호가 현황('17.1월 이후 정상접수)>

구분	종목별 최대호가 평균				종목별 최대호가 Max			
	대형주	중형주	소형주		대형주	중형주	소형주	
상장주식수대비(%)	0.5	0.1	0.2	0.8	5.0	1.7	5.0	5.0
호가수량(만주)	7.3	6.8	5.4	9.2	900.0	627.7	250.0	900.0
호가금액(억원)	11.3	60.5	19.3	8.0	1,418.2	1,418.2	241.6	60.5

* '17.1월이후 정상접수된 종목별 최대호가

(2) 개선방안

- 1회 호가수량 제한 기준(주식 수, 금액)을 현실화하여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 체결을 방지
 - 거래소 기준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증권사 주식매매 보류 기준을 설정하여 이중 통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개선
 - * (예) 증권사의 주식매매 보류기준은 상장주식 수의 1%로 설정하면 거래소 호가수량 제한기준을 상장주식 수의 2%로 설정
- 시장상황,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시장별(코스피, 코스닥)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

→ 거래소 규정 개정

(과제7) 금융투자업계 윤리의식 제고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주식에 착오로 입고 되었음에도 증권사 일부 직원들의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
 - 착오배당된 주식의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수차례 분할주문을 통해 매도를 계속한 사례도 존재
 - 투자자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발생
- 또한, 증권사 점검결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직원 준법교육 및 내부통제 관련 교육 등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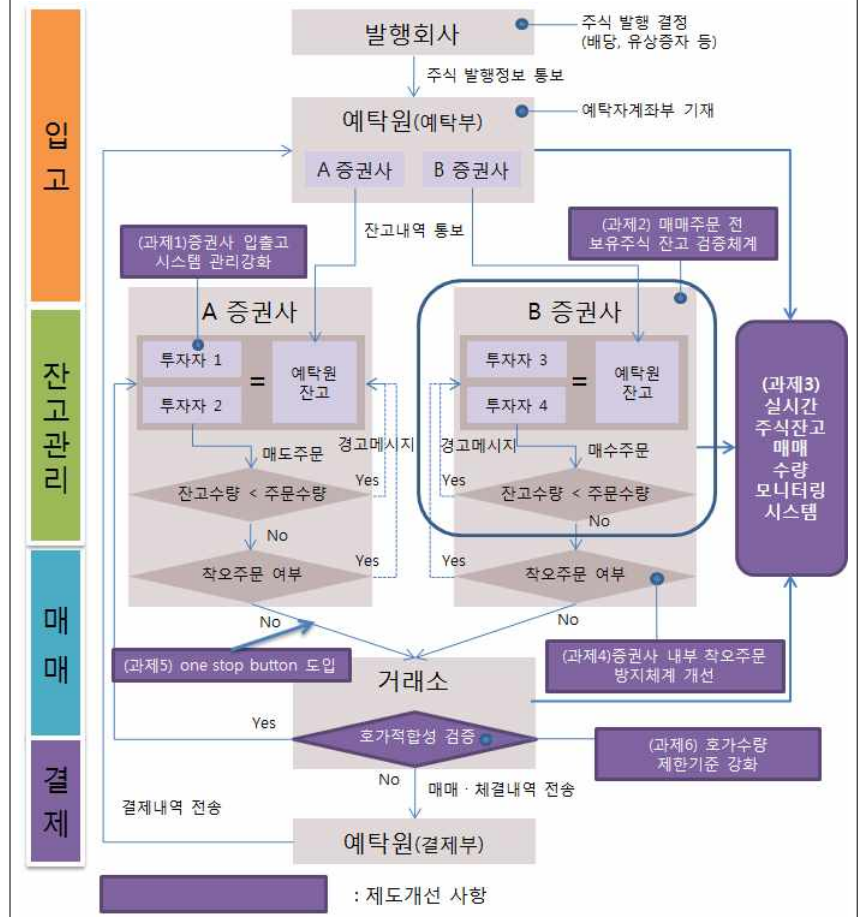
(2) 개선방안

- 협회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준칙 제정
 - 상품판매, 주식 입출고 등 영업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방지 및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윤리 기준* 마련
 - * (예)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,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, 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등
 - 임직원의 윤리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회사에서 관리(교육, 제재 등)하는 시스템 구축
-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윤리, 투자자 보호, 사고사례 등 윤리 및 준법교육을 강화·내실화

→ 금투협 윤리준칙 제정, 증권사 내규 개정

◆ 주식 매매 전 단계(주문 전 - 주문 - 주문 후)에서 주식매매·잔고에 대한 체계적인 상호검증 시스템을 구축

- 증권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, 거래소·예탁원 등 유관 기관의 상호검증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
-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적출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정지 등 사후적 시장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



IV.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

[과제1]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절차 개선

(1) 현황 및 문제점

□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급 절차가 상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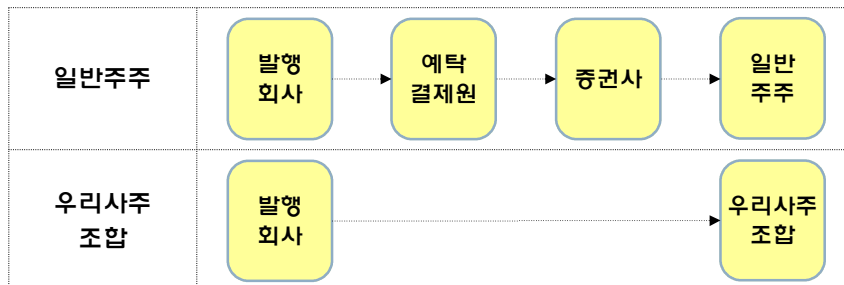
- 발행회사가 일반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를 거쳐 실질주주 등을 확인하고 지급
-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리스크 최소화 및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가 조합*에 직접 지급

* 우리사주조합에서 발행회사 주식을 실제 보유한 자(조합장 또는 조합원)

<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절차가 일반적 절차와 상이한 이유>

- ① (리스크 최소화) 직원(조합원) 개인정보 대한 외부기관 유출, 조합장을 통한 일괄 지급 시 배당금 유용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차단
 - ② (업무효율성) 주식 보유기간 등 조합원의 비과세 요건* 충족여부 확인 및 '先비과세 - 요건미충족시 後환수' 절차 등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부대비용 절감, 급여 공제 등 과세처리 측면에서 효율적
- * (조세제한특례법 제88조의4 ⑨) ① 증권금융 예탁기간 1년 초과, ② 기준일 시점 예탁, ③ 개인별 보유 우리사주의 액면금액 합계 1,800만원 이하

<발행회사의 현금배당 프로세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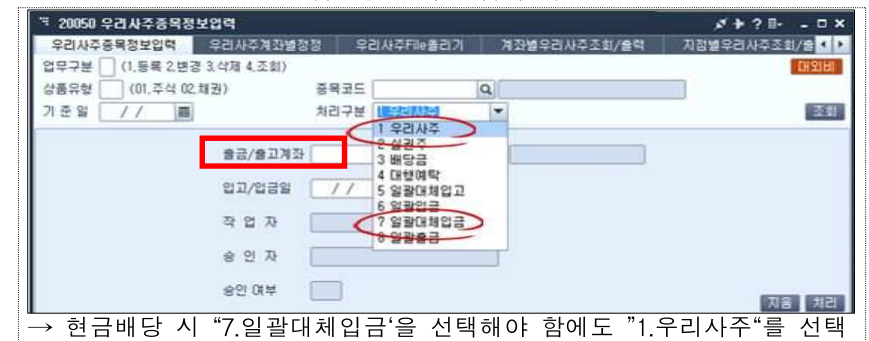


□ 증권사가 발행회사*인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직접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(통상 회사내 총무부 처리)

* 증권사는 다른 발행회사와 달리 주식 입출고 및 잔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여 주식 착오입고 등 사고 발생시 영향을 감안하여 특별관리 필요

- 일부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함께 처리
- 특히,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일 화면에서 처리하고 있어 착오 등으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 가능(삼성증권 사례)

<삼성증권 착오 입력 화면>



(2) 개선방안

□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

- 투자자 주식 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(화면, 처리권한 등)
-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*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하여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

* 금융결제원 등을 거쳐 현금만 입금할 수 있어 주식입고는 원천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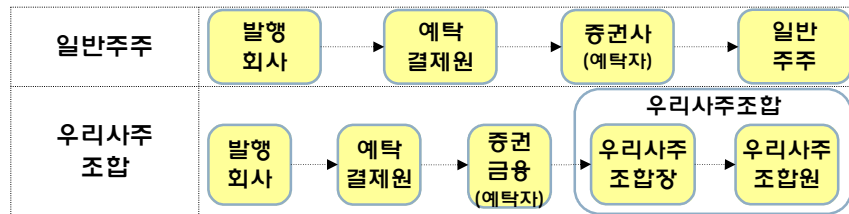
→ 금투협 규정 등 개정 및 증권사 시스템 정비

[과제2]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배당 프로세스 개선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주식배당의 경우 일반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모두 **예탁결제원** 및 **증권사** 등 **예탁기관**을 거쳐 배당주식을 지급
 - 다만,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**우리사주조합장이 조합원 명부를 관리하고** 있어 일반주주의 주식배당과 업무처리에 일부 차이
 - 예탁기관인 **증권금융***이 **우리사주조합장**에게 **배당주식**을 지급하면 **조합장이 조합원**에게 **이체**
- * 일반적으로 증권사, 신탁회사 등 주주가 선택한 기관이 예탁업무를 수행하나,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증권금융이 수행

<발행회사의 주식배당 프로세스>



-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은 대부분 **전산으로 자동처리**되고 있지만 **조합원에 대한 이체** 등 일부는 **수작업**으로 처리

(2) 개선방안

- 수작업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**주식 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*** 추진
 - * (단기) 온라인 주식배당 조회, (중장기) 온라인 주식배당 이체 서비스 제공 (조합원 정보 수집동의, IT 개발, 배당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검토 필요)
-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**주식배당**시 실무 부서의 부서장 결재 후 **준법감시부서 확인** 절차를 부여하여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

→ **증권사·유관기관 시스템 개편 등**

V.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

1 그간의 경과

- 공매도는 **차입한 증권을 매도**하는 투자기법으로 **전 세계적으로 인정**되고 있는 **일반적인 거래방식**
 - 공매도는 **공정한 가격 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**에 기여하는 **순기능***을 보유
 - * 학계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공매도에 따른 일시적 주가하락은 고평가된 주식을 단기간 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가하락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장 변동성 완화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
 - 다만,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**불공정거래의 수단**으로 **활용**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 적용 및 엄격한 운용이 필요
-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**차입 공매도를 허용**하되,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**해외 등과 비교**해서도 **엄격한 규제를 운용** 중
 - 무차입 공매도 금지,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(up-tick rule)*,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보고·공시제도 등을 적용
 - *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
 - 또한, 공매도 관련 **투자자 보호**를 위해 **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개선***(‘17.3월 도입, ‘17.9월 강화) 등 강화된 규제를 마련·시행
 - * 특정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면서,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1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
- 시장참여자, 구조 차이 등으로,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 시 전체 주식거래 규모 대비 **공매도 거래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***
 - *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(‘17년)
 - 한국 코스피 6.0%, 코스닥 1.9% / 일본 38.7%, 미국 40.3%

2 | 현행 공매도 규제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항

- 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
 -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차입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평가
 - 또한, 일부 투자자의 경우 매도주문 체결 이후에 결제주식을 확보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함
- ②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약하다는 지적
 - 현행 과태료(기본 6천만원, 최대 1억원)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제재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상황
- ③ 삼성증권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

3 | 평가 등

-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가격 발견 기능,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 - 특히,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매도 규제 이슈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님
- 다만,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하여 주식 매매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도 점검하고 관리·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
 - 공매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여 시장질서 확립

4 | 공매도 관련 규제 개선방안

(과제1)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 제고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나, 신용도,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
 - * 기관 간 주식대여(대차)는 대여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식을 회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거래 → 신용도, 상환능력 등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거래
-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 - * 개인에게 용자한 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다른 개인에게 대여
 - 대여종목은 담보 상환을 위해 일정계좌 수(100계좌) 이상 등으로 다소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대여가능 종목이 부족
 - 또한 최근 개인으로부터 주식대여를 동의받은 종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변경('17.6월)되면서 대여가능 종목이 감소
 - * '16.9월말 726종목, 1,363만주 → '18.4월말 95종목, 205만주
 - 대여가능한 종목 및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개인대주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축소
 - * 개인대주 서비스 참여 증권사 : '16년 13개 → '18.5월 현재 5개

(2) 개선방안

-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주식 종목 및 수량 확대 추진
 - 증권금융의 대여가능 주식 선정·배분 기준* 등을 개선
 - * (예) 최소 대여동의 계좌수 기준 완화(현행 100계좌 → 70계좌)
 - 주식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포함
-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용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 제공 확대 유도

→ 증권금융 규정 개정 등

[과제2] 매매유형별 증권사의 확인기능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증권사는 통상 투자자로부터 공매도 수탁시 문서, 전화,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공매도와 관련한 **주식 차입여부** 등을 확인
 - 투자자 주식을 **신탁/보관기관**에서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주식 차입여부 등을 **확인하기 어려운 경우***가 발생 가능
- * 증권사는 투자자가 다른 기관에 보관한 증권의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별도로 구분(기타매도)해야 하나, 증권사에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향

(2) 개선방안

- 증권사의 자기·위탁매매 주문 집행시 **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**
 - 매도주문을 ①**공매도**, ②**일반**, ③**기타**로 구분하여 공매도는 주식 차입, 일반은 주식 보유, 기타는 타기관 보관여부 등을 **철저히 확인**하도록 유도
 - 수시·정기적으로 대규모 매도 등 이상거래 유형 등에 대해 위탁자 및 신탁/보관기관에서 **확인 의무화**
 - 필요시* **준법확약서 징구** 등을 통해 **사전 확인절차**를 보완
 - * (예) DMA(Direct Market Access : 주문접수 및 거래체결 신속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매매시스템에 직접 주문이 전달되는 매매)
 - 주식 보관/신탁기관(상임대리인 등) 등으로부터 **주식보유 잔고** 등을 통보받아 **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**

→ 유관기관 규정 개정, 증권사 시스템 정비 등

별첨5

차입공매도 확인 관련 해외사례

- (일본) 공매도 위탁·중개시 **차입 증권의 증명 확인 및 공매도의 명시·확인 의무**를 부과(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§26의2의2, §26의3)
 -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주문 위탁 시, **공매도 여부를 확인**하고 **공매도 주문임을 명시**하여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
 - 증권 차입으로 ‘**무차입 공매도가 아님(결제조치)**’을 투자자로부터 **확인**하고 **결제조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매도 주문 불가**
- * Settlement measure : 대차계약으로 차입공매도 주식의 결제를 보장하는 조치

※ **결제조치의 확인 기록 사항**(금융상품거래법 등에 관한 내각부령 §158의2)

① 고객의 성명 또는 명칭, ② 확인일자(실제 거래일자가 아닌 차입계약을 확인한 날), ③ 결제조치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달처, ④ 결제조치의 내용

- **결제조치 제외 공매도 거래*** 및 타 보관기관 **예탁 종목의 매도**** 또한 기록·보관 의무를 부과
 - * ①고객명, ②확인일자, ③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
 - ** 국내주식시장의 ‘기타 매도’ 중 하나로 해당 종목의 매도 위탁시 ① 고객명, ②확인일자, ③유가증권의 관리 방법을 기록
- (홍콩) 공매도 위탁·중개시 **차입 증권의 증명 확인 및 공매도의 명시·확인 의무**를 부과(증권선물법§171 등)
 - 투자자는 공매도 주문시 중개인에게 공매도 차입증권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, 중개인은 증빙자료*를 받은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전달 또는 처리 가능
 - * 문서, 녹음, E-mail, 컴퓨터 스크린 기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시
 - 투자자의 대리인 혹은 거래소 회원은 **최소 12개월간 증빙을 보관**해야 하며, 홍콩 증권선물위원회(SFC) 요청시 이를 제공
 - 증권사는 해당 주문이 **공매도 주문임을 고지**해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5만 홍콩달러 이하 벌금 등 부과(증권선물법§172 등)

[과제3] 「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」과 연계하여 확인기능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*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**

* 투자자의 매매가능 수량은 공매도 거래를 제외하면 기존 보유주식 + 배당, 권리변환 등 신규 발행주식+주식매매수량(미결제분)

** 장종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주식매매와 잔고관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
(2) 개선방안

- 별도로 구축 예정인 “실시간 주식잔고·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”과 연계하여 공매도 관련 확인 기능을 강화
 - 동 시스템에서 투자자의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 매매내역과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
 -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식매매 등을 실시간 확인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준수 및 위반사항 적출 용이
-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이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거래 징후에 대해 거래소 시장감시 등과 연계하여 대응
 -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체적으로 확인·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
 - 이상거래에 대한 발생사유 등을 확인·분석하여 거래소 등 관계기관에서 매매 위법성 조사 등에 적극 활용

→ 유관기관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정비 등

[과제4]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,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공매도 연계거래를 적발

- 공매도 규제 위반의 경우 증권사에서 거래소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통보*한 경우 행위규제 위반여부를 조사

* 공매도 체결 이후 결제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한 위탁자 등

- 거래소 등의 자료접근권 한계* 및 증권사의 소극적 통보 등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확인 등이 곤란

* 주식 보유잔고 현황, 대차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나, 증권을 보관·관리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징구할 권한이 없음

- 특히, 자료접근 등의 문제로 공매도와 연계된 이상거래의 조기 발견에 어려움*이 존재

* 최근 1년간 공매도 행위규제 위반 및 관련 이상거래 심리·감리 실적 없음

(2) 개선방안

- 공매도 규제 위반 적출 강화를 위한 효율적 감시체계를 구축
 - 「실시간 주식잔고·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」과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을 연계*하여 무차입 공매도 등 적발에 적극 활용
 - * 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소에서 투자자별 주식 보유잔고 등 매매가능 수량을 직접 확인 →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확인 절차 생략 가능
 -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
- 공매도와 연계한 주가하락형 시세조종 감시 강화 등 추진

→ 거래소 규정 등 개정, 유관기관 시스템 정비 등

[과제5] 공매도 관련 조사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면 **주식잔고, 매매시점, 호가** 등을 **유기적으로 분석**해야 하나, **인프라 부족** 등으로 **조사에 미흡**
 - 특히, **주식잔고 자료접근 등의 한계**로 적극적 조사와 감시가 이루어지는데 한계
- 공매도 후 **주가하락**을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**시세조종** 또는 **부정거래 행위**에 해당*되나 **실제 적발·적용은 어려운 상황**
 - * 法§176(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), 法§178(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)

(2) 개선방안

- **전담조사반**을 두고 **“무관용 원칙”**에 따라 **공매도 및 주문·수탁의 적정성** 등을 중점 조사
 - 특히, **차입공매도 관련 확인의무**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**점검을 강화**
- **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 등 호가규제 회피** 행위를 **명시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**에 포함*
 - * 法§178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) 상 금지사유 규정
- **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** 및 **시세조종** 등에 대해서도 **조사 강화**

<공매도 관련 중점 조사 항목>

중점 조사항목(예시)	공매도 활용 불공정거래 유형(예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자의 주식 차입 또는 잔고보유 확인의무 이행 - DMA 주문 관련 약서 징구, 사후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매도를 일반매도로 표시하여 업틱을 제한없이 주가하락 유도

→ **기관별 인력확충 및 조사 강화, 자본시장법 개정 등**

[과제6]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**제재수준이 미흡**하다는 지적 존재
 - **해외의 경우** 공매도 규제 위반 시 **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**할 수 있으나*, **우리나라는 형사처벌 근거가 없음**
 - * (미국)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후 결제 불이행시 5백만\$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(홍콩) 10만홍콩\$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
 - **과태료 부과**(기본 6천만원, 최대 1억원)만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등을 통해 얻은 **경제적 이득을 환수**하기에 **부족**
 - **미국의 경우**,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**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한 경우** 이에 **상응하는 제재금***을 부과하여 **부당이득 환수**
 - * '12.1월 미 SEC는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이득을 취한 투자자 및 증권사에 각각 1,342만\$ 및 400만\$의 제재금(부당이득+벌금)을 부과
 - 무차입 공매도 위반시 증권사에 **매도증권을 일정기간 100% 납부***해야 하나, **위반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**
 - * 무차입 공매도 기간 및 누적 매도금액에 따라 사전납부 기간이 20일~60일

(2) 개선방안

-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**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**
-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**금전적 제재를 현실화**
 - ① 공매도 규제를 **계속적·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보아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**
 - ② 규제 위반에 따른 **부당이득을 환수**할 수 있는 **과징금 부과 검토**
 - ③ 규제 위반 수준에 따른 **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을 확대**
 - * (예) 5일간 10억원 이상 무차입공매도 시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: **현행 60일 → 개선 120일**

→ **자본시장법 및 금융위 규정, 거래소 규정 등 개정**

VI. 향후 추진계획

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

○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추진과제는 '18.8월까지 세부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

※ 내부통제기준의 경우 금감원에서 쉐 증권사에 대한 점검(5.9~6.8 예정)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

○ 우리사주조합 관련 사항은 증권금융 및 금투협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및 시스템 정비 등 추진

○ 금번 대책 관련 각종 시스템 구축*은 3분기까지 세부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'19년 상반기** 중 시행 추진

*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, 주식 잔고관리·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

** 정보집중 방식 설계 및 업계 및 유관기관 전산개발 등을 소요

② 공매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'18.3분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추진

③ 향후 “매매제도 개선반”을 중심으로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서 금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차질없이 대책 추진

○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금감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 검토

참고

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추진일정(案)

추진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	추진주체
<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>			
1. 매매주문 전			
1. 증권사 주식 입출고 시스템 관리 강화	금투협 규정 등 개정, 증권사 시스템 정비 등	'18.3Q~	금투협 예탁원 등
2.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 구축	금투협 규정 등 개정, 증권사 유관기관 시스템 정비	'19.1Q	금투협 예탁원 코스콤 등
2. 매매주문 단계			
3. 실시간 주식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	실시간 주식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	'19.上	코스콤 예탁원 거래소 등
4. 증권사 착오주문 방지체계 개선	금투협 규정 개정, 증권사 시스템 정비	'18.4Q	금투협 등
3. 매매주문 이후 단계			
5. 비상 버튼 시스템 도입 등	금투협 규정 개정, 증권사 시스템 정비	'18.3Q	금투협
6. 호가수량 적합성 검증 강화	거래소 규정 개정	'18.3Q	거래소
4. 기타			
7 금융투자업계 윤리의식 제고	금투협 윤리준칙 제정, 증권사 내규 개정	'18.2Q~	금투협
< 우리사주조합 해당 시스템 개선 >			
1.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 배당 절차 개선	금투협 규정 개정, 증권사 시스템 정비 등	'18.3Q	증권금융 금투협
2.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배당 프로세스 개선	증권사·유관기관 시스템 개편 등	'18.3Q	증권금융 금투협
<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 >			
1.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 제고	증권금융 규정 개정 등	'18.下	증권금융
2. 매매유형별 증권사 확인기능 강화	유관기관 규정 개정 및, 증권사 시스템 정비 등	'18.3Q~	금투협 거래소
3. 실시간 주식잔고·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확인	유관기관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정비 등	'19.上	코스콤 예탁원 거래소 등
4.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	거래소 규정 개정, 유관기관 시스템 정비 등	'18.下~	거래소 등
5. 공매도 관련 조사 강화	인력 확충 및 조사강화, 자본시장법 개정 등	'18.下~	금융위 금감원 거래소
6.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	자본시장법 및 금융위 규정, 거래소 규정 등 개정	'18.下~	금융위 거래소